



정통부, 대학 IT연구센터 4곳 신규 선정

정보통신부는 차세대이동통신 등 IT839 전략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대학에 IT연구센터(ITRC)를 신규로 선정했다.

올해 신규 선정된 센터는 지정공모 중 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간 IT 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선정된 ▲국방IT 분야(차세대 이동통신)에서는 아주대학교 '국방전술네트워크 연구센터' ▲IT기술의 융·복합 환경변화에 대응한 IT·BT융합기술 분야인 u-헬스케어 센서 및 컴퓨팅분야(차세대 PC)는 경희대학교 '동서신의학 u-라이프케어 연구센터'가 선정됐다.

또한,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한 자유공모의 경우 ▲RFID/USN 분야는 동명대학교가 '유비쿼터스 향만 IT연구센터'와 전남대학교가 '친환경 어류양식 연구센터'가 각각 선정됐다.

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이달에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데, 지정공모로 선정된 2개 연구센터에는 연구비 및 기자재구입비, 연구참여 대학원생 인건비 등에 최장 8년간 매년 8억원 규모로 총 64억원을 지원하고, 자유공모 2개 연구센터는 최장 5년간 연 5억원 규모로 25억원이 지원된다.

문의: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 오태건
(02-750-2323, gun@mic.go.kr)

정통부, 대포폰 단속 강화

정보통신부는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(이하 '대포폰')을 활용한 사기·불법 스팸 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을 경찰청 및 이동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9일 밝혔다.

정통부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,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SMS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전에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세이프(M-safer)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. 또한, 이동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포털들의 인터넷상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(블로그·카페 등)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한편, 실제 적발된 대포폰 이용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이동3사 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운영하여 신고접수된 대포폰 사례들에 신속대응케 된다.

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된 후 유통되어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·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왔다.

실제로 사기범들이 옥션 등 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하여 대포통장에 입금케 한 후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.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,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하여 통신요금채납 등 문제도 야기하여 왔다.

문의: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이용제도팀 정철중
(02-750-1351, jumg@mic.go.kr)